‘千회장 영장’ 여권에도 불똥 튀나

정·관계 인사와 두루 친분…검찰 수사 칼날 주목

檢, 권여사 재소환뒤 盧 前대통령 신병처리 결정

대검 중수부가 19일 ‘박연차 게이트’의 핵심 인물 중 한명으로 분류되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소환함에 따라 게이트의 한 축인 ‘세무조사 무마로비’에 대한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검찰은 이르면 20일 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신병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그의 진술 여하에 따라선 막바지에 이른 수사의 불똥이 다시 여권 인사 등으로 튈 수도 있다는 게 검찰 안팎의 관측이다.

검찰은 이후 그동안 미뤄왔던 전·현직 정치인과 판사, 경찰,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 6월 말까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관련된 수사에서 손을 턴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의 핵심 줄기로 박 전 회장-천 회장-한상률 전 국세청장 라인을 사실상 지목하고 있다.

천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절친한 대학동기이고 정·관계 인사와 두루 친분을 맺어왔으며, 박 전 회장과도 의형제 사이란 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천 회장이 직접 여권 핵심 인사들에게 박 전 회장 구명 로비를 벌이고 다녔거나 박 전 회장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따라서 천 회장의 뒤를 쫓다보면 또다른 증거나 그의 진술에 의해 검찰의 수사 칼날에 베일 여권 인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일단 세무조사 무마 로비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천 회장의 로비 대상 가운데 한 전 청장 이외 고위직이나 정치인 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한 전 청장) 이상이 누가 있겠느냐. 여권 핵심 인사와도 통화한 내역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이 천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권양숙 여사를 재소환한 뒤 노 전 대통령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하면 ‘박연차 게이트’ 수사는 가파른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셈이 된다.

검찰은 민유태 전주지검장과 부산고검 김종로 검사, 대검 C과장, 또 검찰 고위직 출신인 이종찬 전 민정수석 등 검찰 내부 인사에 대한 조사를 끝낸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6월이면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해 일단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H의원 등을 조사한 뒤 이달 말 이미 조사한 박진·서갑원 의원 등과 함께 사법처리 방향을 일괄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어 큰 변수가 없는 한 전·현직 자치단체장과 법원·경찰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해 6월 말까지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의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신종플루 감염 공포가 일본 열도를 뒤덮고 있는 가운데 19일 도쿄 참의원회관에서 일본 중학생들이 위생 마스크를 쓴 채 ‘참의회 투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베트남 女 환승객 ‘신종 플루’ 확진

국내 4번째…日 감염자 178명으로 늘어나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던 도중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추정 환자로 진단됐던 베트남 여성(22)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보건 당국 관계자는 “어제 인천공항 환승장에서 신종플루 추정환자임이 밝혀져 국내 입국 절차를 밟은 뒤 수도권의 한 병원에 격리 입원된 베트남 여성의 바이러스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신종플루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여성이 정식 입국 절차를 밟아 국내 병원에 격리됨에 따라 일단 이 여성은 한국에서 발생한 네 번째 감염자로 간주됐다.

이와함께 19일 오전 11시 10분께 일본 오사카 간사이공항에서 대한항공 KE734편을 타고 제주에 도착한 승객 가운데 60대 일본인 여성이 발열감시 카메라에 감지돼 검역소 휴게실에 격리됐다.

한편 일본에서 신종플루가 효고현과 오사카부를 중심으로 계속 번지는 가운데 일본 내 감염자가 이날 오후 3시 현재 178명으로 불어났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이날 고베시에서 38.9도의 고열 증세를 보인 1세 여아가 신종플루로 확인되는 등 효고현과 오사카부에서 추가로 15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

오사카와 고베 등은 인구가 밀집된 경제중심지로 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신종플루 바이러스가 타지역으로 번졌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도·광역시 통합…주민 의견 따라야”

■경실련·전공노 ‘지방행정체제 개편 토론회’

현행 광역지방단체인 도(道)를 폐지하고 여러 개로 쪼갤 것이 아니라 우선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고 장기적으로 남·북도로 나눠져 있는 곳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강형기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도를 폐지할 경우 ▲중앙집권시대로 회귀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이양할 터전이 없어지는 한편 ▲국정 전체의 재편을 단행해야 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강 교수는 또 “지방자치단체 간의 통합과 분리는 원칙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필요성을 인식할 경우 상향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우선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적 연대와 광역행정을 보다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기우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인하대 법대 교수)도 “도를 폐지하면 중앙집권이 가속화하고 국가기관이 비대화된다”며 “시·군 통합의 경우도 기초자치 포기로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지역정체성이 상실된다”고 우려했다.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도 “현재 지방행정체제 논의는 지역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 정략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며 “신중앙집권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허 훈 대진대 교수는 “현재 구역개편에 대한 논의는 분권과 자치의 길을 연다기보다는 국가의 하부행정을 개편하려는 중앙집권의 필요에 의해 전개되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의 시계를 뒤로 돌리려는 중대한 반동이 될 수 있다”고 가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민유태 전주지검장 전보

박연차에 1만弗 받은 혐의

법무부는 19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민유태 전주지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검사를 일선 기관장으로 계속 근무하게 할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나 해당 기관과 지역의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우선 전보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재원(51·사법시험 24회)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전주지검장으로 발령됐다. /연합뉴스

미 합참의장 “北, 2차 핵실험 우려스럽다”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18일(현지시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제2차 핵실험 문제에 우려를 표명했다.

멀린 합참의장은 워싱턴의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국방관련 토론회에 참석, 북한의 2차 핵실험 준비 여부에 대한 질문에 “그(김정일)가 핵무기들을 보유중이기 때문에 확실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멀린 합참의장은 이어 “북한 지도자가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로부터 북한을 더욱더 고립시키는 결정을 홀로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는 그가 과거에도 행했던 것으로 새로운 전략이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